

이런 대학 입학 제도를 꿈꾼다, “선별” 시험을 넘어



윤 대 희

연세대 공과대학 학장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dhyoun@yonsei.ac.kr

한 경 희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선임연구원
khan01@yonsei.ac.kr

1. 이공계열 입시의 문제

이공계 위기가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한 이후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진단,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공계 인력난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최근의 이공계 위기론은 사실 당혹스러운 것이다.

2001년에 들어오면서 불거진 이공계 위기론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이공계열을 전공하거나 졸업한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의 위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경제를 휘어잡을 듯 승승장구했던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중국 등 후발국들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목도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공계 위기’란 곧 제 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공계 장학금 지원, 고교 교육 개선책, 입시제도 개선,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차세

대 성장 동력 산업지원정책 등과 같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공계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상의 정책적 대응 방안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입시제도 개선이다. 대학 입학을 바라보고 있는 60여 만 명의 대입 응시자들과 그들의 부모, 예비 고3들의 눈이 모두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변해 온 입시제도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를 익힌 우리 학부모들과 사교육 시스템은 그 어떤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입시용 학습을 주도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유연성을 발휘해왔다.

이 글은 이공계열 입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성찰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 즉 국가의 과학기술능력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사고의 전환과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는 흔히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진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몰려 있

는 듯 보인다. 하지만 우수한 공학인재 육성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입시제도는 문제의 일부에 속하며 오히려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과학기술 혹은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와 구성이야말로 문제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대학입시가 대학 이전의 교육과정과 대학 이후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내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단순한 '학생 선발'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공계열의 대입제도 개선은 원론으로 되돌아가 교육의 일차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변해야 할지에 대한 전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과 전공의 서열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초·중등교육이 더 나은 대학과 전공으로 진학하기 위한 사실상의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선행학습이 일반화되면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학습이 공공교육을 따돌리고 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 실력은 향상되기는 하는 걸까? 해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교수들은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입시용 공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초학력은 변하지 않거나 저하되면서 대학교육과의 연속성도 갖추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개인의 자질과 소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공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자질과 다양성이 무시되고 오로지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에 대한 시장 경제의 관점에 따라 대학과 전공이 결정되는 현 시

점에서는 이·공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꿈꾸기가 어렵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대입시제도 개혁이 어려운 데는 이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립된 관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 이공계열 입시의 이슈

애초에 이공계 위기론은 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공계 위기의 해법이 마치 보다 많은 학생들을 이공계열로 유도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 수준별 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 평준화 제도의 논의는 지난 30년 동안 도입, 확대, 보류, 해제, 재도입, 확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회정의의 문제, 학력지향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선별 기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교육 기회 균등과 교육선택권을 둘러싼 기본권 향유의 문제 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상이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논쟁은 교육의 평등성, 자율성, 수월성,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 제도가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었던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저해, 고등학교의 서열화 등 심각한 교육문제들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의 문제였던 교육기회의 제한과 사교육비, 위화감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

음을 강조한다. 반면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저해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켰으며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의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 교육과 학생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왔다. 하지만 평준화와 비평준화라는 양극단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평준화 논의는 단지 교육적 이슈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측면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병폐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회균등과 평등성, 획일화와 통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평준화 정책의 논리와 기본 가치들은 다양성과 경쟁력, 개방화와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기본 구조를 살리면서 미래의 사회적 변화 추세와 인적 자원 개발 방향에 부응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이 평등성과 자율성, 수월성 등의 가치를 고르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면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평준화와 비평준화 제도를 운영하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열정, 상상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많

이 배출되어야만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분야의 희망이 생겨난다. 틀에 박혀 주어진 문제 풀이에만 익숙해진 전자계산기적 인물이나 혹은 뛰어난 기술적 감각을 지녔지만 상상하거나 도전할 줄 모르는 인물은 과학기술의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입시제도는 이런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전문적인 기술적 능력과 감성적인 지식(emotional intelligence) 능력을 모두 갖춘 21세기의 우수공학인재를 양성하려면 따라서 평준화, 비평준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 우리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제도가 교육의 목적인 인재 양성이 아니라 “선별”용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데 있다.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것이다.

3. 인재를 고르는 시험에서 양성하는 시험으로 변해야 한다

이공계 대학입시에서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은 대학 입시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이공계열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그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소수의 몇몇 대학과 특정 전공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입시 전쟁의 폐잔병들로 양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도전 의식과 창의력, 통찰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배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난 1월에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방안’에는 이공계열 진학의 경우에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다양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있다. 이 제안은 과학기술 영역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일찍부터 과학기술 예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열에서 소질이나 재능을 발견한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심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입시용 학습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일을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균형 잡힌 교육을 지향하되 입시용 반복학습을 피하고 실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 과학교육을 체계화하는 교육의 기초가 준비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어릴 때부터 과학적 상상력과 기술적 감각을 갖춘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학생들이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자율에 따라 전문 교과과정 이수(AP)나 이수교과목 인정시험(PT)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공계열 입시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소질과 재질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과과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지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을 마치 특정 전공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특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기술은 사회와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인 동시에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누구나 접하고 다루는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처럼 입시 때에나 어려운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문과와 이과의 구별 없이 이공계열 과목을 일반 과목과 같이 취급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질과 재능에 따라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대학 입학시험이 주객이 전도되어 더 나은 교육이 아니라 학생을 선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시제도는 학생 선발을 넘어 보다 나은 교육을 지향하는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담당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부모들의 상투적 이야기들이 멈추어질 것이다.

